

양곡법 '尹 거부권'?... 깊어지는 여야 '갈등의 골'

'이 대표 1호 법안' 野 단독 통과 정부 측 의견 경청 후 행사할 듯 전남 정치권도 여야 공방 벌여

야권의 단독 법안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놓고 여권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 처리된 '쌀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긴 했으나, 결론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넘어오면 숙고한 다음에 기한 내에 결정하게 될 거다. 당초 언론이 예상한 것처럼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다.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면서도 "(거부권 행사)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곡관리법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민주당은 쌀값 하락을 막아 식량자급

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식량안보를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양곡관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다음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 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를 해야되고, 그러면 농업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를 강행한 것은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서 추진한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

법위원회에서 막히자 같은해 12월28일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어 지난 1월 여당 반발 속에 표결에 부쳐져 본회의에 부의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남지역도 양곡관리법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직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농업재정 낭비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법제화를 통해 과도한 예산 투입 없이 쌀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양곡관리법은 팍팍하고 힘든 농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불어 넣

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이고 식량안보 법안이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발농업과 과수농업, 축산업 등 타 농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는 법안이다"며 "이 법안은 농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대안도 없이 강성 지지층을 위한 선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은 문재인 정부도 반대한 법으로 쌀값 가격 정책 실패를 현 정부에 폭탄 돌리기식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 농업인 지지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득실만 따진 포퓰리즘 입법이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안중근 의사 113주기' 맞아尹 대일외교 비판

"尹정권 日 퍼주기에 정신 팔려" "安 의사 '동양평화'의 꿈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를 맞아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 우리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굴종 외교'로는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을 지켜낼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은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하신지 113년이 되는 날이다. 대일굴종외교로 순국선열들 빙기 부끄러운 탓인지 올해는 더욱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고 썼다.

그는 "최근 안중근 의사께서 옥중에서 '동양평화만민세'라고 쓴 유묵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안 의사가 쓴 것은 단지 이토 히로부미의 심장이 아니었다. 서른한 살 조선 청년은 동양평화에 대한 굳은 신

념으로 침략과 탈취, 전쟁으로 대표되는 제국주의의 심장을 썼다"고 전했다.

이어 "순국선열들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지만 우리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은 녹록치 않다. 북한은 도발을 이어가며 평화를 위협하고 미·중 패권 경쟁의 파고가 한반도로 들이닥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급박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 퍼주기에 정신이 팔려 진영대결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순국선열들의 희생으로 높아진 국격을 바다까지 추락시켰다. 한 반도를 침탈했던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는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느 때보다 안중근 의사가 목 놓아 외친 '동양평화'의 꿈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니는 한 평화도 변영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대표, 양경수 민주노동당 대표 등이 지난 25일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동규, 이재명 만난다... 31일 李 재판에 증인출석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첫 증인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이번 주 출석한다.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제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면전에서 어떤 작심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오는 31일 진행한다. 이날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는 데 첫 증인으로 유 전 본부장이

나선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차장 사이의 과거 친분을 묻는 검찰 측의 주신문에 답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차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비명계 "민형배, 꿈수 탈당 국민들께 사과해야"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은 26일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과정에서 일어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꿈수' 탈당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꿈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우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의 꿈수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전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헌재 '검수완박' 여야 공방... 시행령 추진 맨 전면전

국힘 "거대 야당에 면죄부" 민주당 "한동훈 자진사퇴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에 여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권 확대가 현재의 벽에 막히자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 돌파하겠다고 시사해 여야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이 두 법안의 통과를 선포한 행위를 무효화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여야 간 공방 소재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에게 면죄부만 줬다"고 평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토론과 합의가 우선돼야 할 의회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판결이란 점에서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분명한 점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때 민주당이 자행한 민형배 의원의 '꿈수 탈당'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도 명백히 존재했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헌법적 권한과 민주적인 질서를 구현해 운용돼야 하지만, '검수완박'법은 오히려 절차적 오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어제도 오늘도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촉매를 들것이 아니라,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장을 향한 심판도 청구했던만큼, 당시 의장을 향해서는 "회기 쪼개기, 무제한 토론 제한 등 반헌법적 행위를 직접 자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검수완박'법의 효력이 인정된 점을 강조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이와 함께 사법제도 논의를 촉구하며 '검수완박의 강'을 넘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

소리도 나온다.

박주민 의원은 "헌재가 법무부, 검찰의 권한쟁의를 각하했다. 청구인 한동훈 장관의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결정"이라고 썼다.

박 의원은 "헌재는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침묵한다'며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의한, 즉 입법권자인 국회의 권한이자 판단사항임을 명시했다"며 "한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의 논거 대부분이 틀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진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위원회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입법권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라며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 정권 안위를 위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 한 장관은 이번 결정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자진사퇴를 양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 탄핵 주장까지 나오는 모양새다. 다만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라 또 한번의 장관 탄핵 국면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서울·김선욱 기자